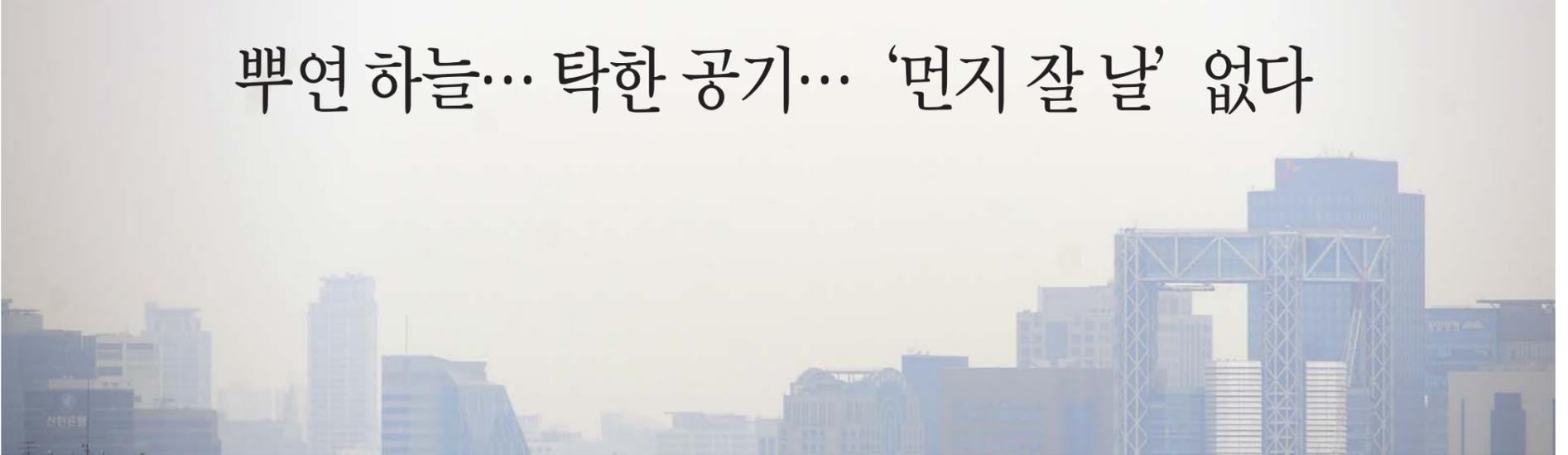


뿌연 하늘... 탁한 공기... '먼지 잘 날' 없다



1~3월 주의보 발령 횟수 86번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육박
하루 평균 농도 '나쁨' 기록 61차례

시민들 방진 마스크 착용 일상화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들여놓는 등
자구책 세움에도 감당하기 역부족

정부 대책 쏟아내도 부족한 수 없어
부처 간 대책은 '엇박자'에 불과



하루가 멀다고 나타나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대기오염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올해 1월~3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총 86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에 육박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전국의 올해 1~3월 미세먼지(PM10) 농도는 32 $\mu\text{g}/\text{m}^3$ 로 지난해 같은 기간(30 $\mu\text{g}/\text{m}^3$)에 비해 2 $\mu\text{g}/\text{m}^3$ 높아졌다. 전국 17개 시·도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68.6 $\mu\text{g}/\text{m}^3$ 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46.1 $\mu\text{g}/\text{m}^3$ 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81~150 $\mu\text{g}/\text{m}^3$)을 기록한 날은 전국에서 61차례나 됐다.

미세먼지 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할 때,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9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한다. 또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00 $\mu\text{g}/\text{m}^3$ 이상이면 경보를 발령한다.

미세먼지의 습격으로 방진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됐고, 집집마다 공기청정기와 공기정화 식물을 들여놓고 나름의 자구책을 세우고 있지만, 미세먼지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 숨 좀 쉬자... 미세먼지가 바뀌는 대한민국의 일상

하루가 멀고 나타나기 시작한 시민들의 평범한 일상까지 바뀌고 있다. 이제는 마스크를 쓴 출근길이 흔한 풍경이 됐고, 집안에는 공기정화 식물이나 공기청정기를 들여놓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탓에 봄철 초등학교 운동회 모습도 달라졌다. 방진 마스크를 쓴 채 진행되거나 규모를 축소해 실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아예 취소하는 학교도 적지 않

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야외수업 기준을 강화하도록 대응 지침을 강화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야외수업 자체 기준을 기존 '예비주의보'에서 집 단체인 '나쁨' 단계로 강화했다. 외출 후 손발을 잘 씻고 면역력을 키우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족 간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

주부 A(48)씨는 "외출할 때 방진 마스크를 꼭 착용하도록 하고, 외출 후에는 손발을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씻는다"며 "가족들과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비타민과 홍삼은 꼭 챙겨 먹는다"고 말했다. 외출을 자제하는 시민들도 부쩍 늘었다. 도심 은행에서 근무하는 K모(37)씨는 "평소 직원들과 점심을 먹고 커피는 근처 여의도공원에서 마셨는데, 올해는 미세먼지가 심해 실내에서 마시는 편"이라며 "직원들과 단체로 야구장에 가려던 행사가 취소되는 등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시민들은 저마다 자구책을 찾고 있다. 심지어 미세먼지 방지 제품을 직접 만드는 시민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비싼 공기청정기에 부담을 느끼거나, 쓰고 싶은 용도에 맞는 제품이 없어 부품을 구입해 직접 만드는 것이다. 실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DIY 제품을 뽐내는 글과 사진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유모차용 공기청정기를 직접 만든 직장인 B(36)씨는 "모양은 투박하지만 아이 건강을 생각해 필터를 구입해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며 "용도에 맞는 다양한 상품이 나오지 않아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환경 당국의 대책은?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시민들은 갈수록 숨이 막히지만, 환경 당국의 대책은 뒷걸음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퉀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부족한 수가 없는 실정이다. 부처 간 대책이 엇박자를 내거나 재량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먼지 총량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미세먼지 보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중국만 탓하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대책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환경 당국의 예보와 경보체계 등 관련 정보에 대한 불신마저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기 배출물질 가운데 '먼지' 항목에 대한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각장이나 발전소 등 수도권의 대형사업장 150여 곳을 대상으로 먼지 총량을 규제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05년 이전 등록된 화물차 40여 대를 선정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건설공사업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장기과제로 관련 연구 용역도 의뢰했다.

실제 한국의 초미세먼지(PM2.5) 기준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

다. 한국의 초미세먼지는 일평균 50 $\mu\text{g}/\text{m}^3$ 를 초과하면 나쁜 것으로 분류하지만, 미국·일본 등에서는 35 $\mu\text{g}/\text{m}^3$ 를 초과하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21일 우리나라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용어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따라 미세먼지(PM10)는 '부유먼지', 초미세먼지(PM2.5)는 '미세먼지'로 각각 변경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 기준을 적용하며 지름이 10 μm 이하 물질(PM10)을 '미세먼지'로 부르기 시작했다. 또 2015년 환경기준을 개정해 지름이 2.5 μm 이하 물질(PM2.5)에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을 붙였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지름 2.5 μm 이하의 물질(PM2.5)을 '미세먼지'로, 지름 1 μm 이하의 물질을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또 정부는 2005년 이전 화물차에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시범 부착하고, 건설공사장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도 의무화한다. 2005년 이전 노후 화물차(적재중량 2.5톤 이상)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단 추진하던 것을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까지 추가한다.

또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오는 2029년까지 20기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2015년)을 통해 2029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를 증설할 계획이었다. 다만,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총 53기 중 30년 이상 된 10기는 폐지하고, 나머지는 환경설비와 성능개선을 통해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0기의 노후화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동시에 20기를 신규로 증설하면 10기가 추가로 늘어나는 셈이다.

/뉴스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